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노선

배 정 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일동맹 강화와 아시아 외교의 조화 추구

고이즈미 정권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이를 위한 대미 편중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반면, 한국, 중국 등과는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후유증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주요 외교과제는 동아시아외교의 복원이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고이즈미 정권시 갈등의 불씨 가운데 하나였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단명으로 끝났고, 동아시아외교의 복원은 여전히 주요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로 등장하면서 후쿠다 정권의 아시아외교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2007년 9월 15일 총재 출마 기자회견에서 총리에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방침을 명백히 하였고, 9월 19일 일본주재 외국특파원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등 주변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주변국의 기대대로 2007년 10월 1일 국회에서의 첫 소신표명 연설을 통하여 적극적인 아시아외교를 선언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과 미래지향형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고, “중국과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호혜관계를 구축해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후쿠다 총리는 미일 동맹의 견지가 일본외교의 기본이라고 역설하면서, ‘인도양에서의 해상자위대 급유 활동 연장’에 대해 야당이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즉, 후쿠다 총리는 대외정책의 기초가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외교의 조화임을 명백히 하였다.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아시아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동아시아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다 정권은 미일 동맹의 강화 기초아래 국제협조를 향한 전방위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화와 압력’ 기초 유지, 대화 중시의 대북정책 노선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에 최역점을 둔 대북강경정책을 전개하였고, 북일관계는 ‘2·13 합의’ 이후 두 차례의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을 거쳤지만 별 진전없이 악화된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

로 후쿠다 정권의 등장은 그동안의 일본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과정에서 “내 손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욕을 표명하면서 북일 관계가 매우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후쿠다 총리는 제재 일변도의 강경책만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역점을 둔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을 시사하였다.

그는 또 10월 1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과의 최대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과 국교정상화의 실현 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 대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가 거론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후쿠다 정권은 당·정 협의를 거쳐 10월 9일 아베정권에서 결정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방침’을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북일 관계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동 방침을 뒤집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다 총리가 국익을 위해 납치문제보다 국교정상화를 우선시키고 있고 대화 중시의 대북정책을 전개하려고 하지만, 후쿠다 내각이 내년 중의원의 해산을 대비한 잠정적 내각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쿠다 내각이 대화 중시의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북일 관계개선의 성과가 필요하다. 북일간에는 납치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과거청산, 국교정상화 문제 등의 현안이 있는데, 악화된 국민들의 대북 인식 및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납치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후쿠다 정권의 아시아 중시 외교 및 대화 중시 대북정책의 전개를 위하여 한일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이다.